

뷰티-제약·바이오, 교차진출 활발 중남미 등 글로벌 사업 영토 확장

뷰티기업, 에스테틱 저변 확대
제약·바이오, 화장품 매출 상승
“융합 생태계가 대세가 될 것”

K뷰티 대표 주자인 에이피알이 전문 스킨부스터를 앞세워 중남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기존 보톡스·필라·스킨부스터 등 전문 미용의료 기기와 의약품을 다룬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고기능성 화장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한 상태. 바야흐로 K뷰티와 제약·바이오 간의 영토전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15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스킨부스터 제품을 중남미 시장에 본격 공급하기 시작한다. 오는 20일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현지 클리닉 관계자와 의료진, 인플루언서 등 약 300명을 초청해 공식 대리점 인증서 수여식과 사전 출시 행사를 개최한다. 칠레 시장 내 정식 출시일은 오는 11월로 예정됐었다.

이번에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제품은 ‘에이지알’과 ‘에이지알 플러스 G’ 등 2종이다. 두 제품 모두 연어 DNA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소재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에이지알’은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로 피부 도포 방식의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고, ‘에이지알 플러스 G’는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로 피



스킨부스터 ‘에이지알’과 ‘에이지알 플러스 G’ /에이피알

하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의 수출용 4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에이피알은 용도와 투여 방식에 따른 제품군을 바탕으로 현지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체 생산 역량도 갖췄다. 지난 2024년 하반기 스킨부스터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 국내 경기 평택에 위치한 에이피알팩토리 제3캠퍼스를 PN 소재 전용 생산 시설로 고도화했다. 제3캠퍼스는 관련 인허가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향후 일본, 중동 등 글로벌 전역으로 스킨부스터 공급을 넓히는 한편, 국내 시장 출시를 위한 인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에이피알이 화장품·뷰티 다바이스에서 전문 에스테틱 영역으로 저변을 넓히는 사이, 기존 미용의료 강자들은 반대로 화장품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수익 모

델을 구축하고 있다.

휴젤의 올해 상반기 누적 화장품 매출은 3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14.35%까지 올라서며 톱신 58%와 필라·스킨부스터 26%의 뒤를 이었다.

실제로 휴젤은 클리니컬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의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 진출해 있다.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 유통사 CJ올리브영과 협업해 미국 유명 뷰티 편집숍 세포라 매장에 입점하기도 했다. 또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주요 도시에서 팝업 행사를 선보이는 등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PN 제형 안전미용 의료기기 ‘리쥬란’으로 시장을 개척한 파마리서치 역시 화장품 사업을 핵심 성장 축으로 안착시켰다. 파마리서치의 전체 매출 구성에서 의료기기 54%에 이어 화장품 매출 비중은 32%까지 확대됐다. 리쥬란 브랜드를 활용한 힐러라인, 클리닉라인, 더마힐러라인 등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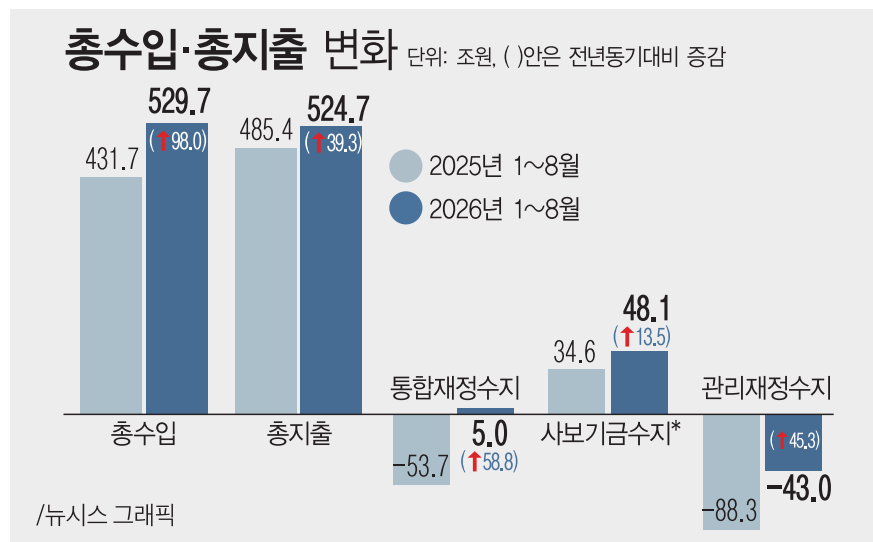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의 화장품 사업 성장은 메디컬 스킨케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맞물려 있다”며 “스킨부스터라는 전문성과 뷰티라는 대중성을 아우르는 융합 생태계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1월~8월 나라살림 적자 43조… 8년래 최저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 법인세 급증

반도체 호황기에 힘입어 나라살림 적자가 작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올해 8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28조 원이나 불어난 결과다.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총수입은 529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에 비해 98조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이 329조9000억 원으로 69조1000억원 늘었다. 8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79.4%로 80%에 근접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각각 9조2000억 원, 19조8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급증했다. 누적 법인세 수입은 91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이 기간 101조1000억 원 견했다. 소득세 역시 전년 대비 증가(14조4000억 원)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수가 확대된 영향이다. 또 증권거래세(9조2000억 원)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서울 환원 등에 힘입어 7조 원 증가했다.

8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39조3000억 원 증가한 5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지출은 376조원으로 31조2000억 원, 기금지출은 148조5000억 원으로 8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5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3조7000억 원 적자)에 비해 58조8000억 원이나 적자가 개선됐다. 8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8년(16조 원 흑자)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대폭 개선됐다. 1~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년 동기(88조3000억 원 적자) 대비 45조3000억 원이나 개선됐다. 올해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12조 원 적자) 이후 가장 작았다.

기획재정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이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9년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71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4조 원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불법으로 전시되는 야생동물… 실태 파악도 못 해

야생동물법 개정안 시행 3년
미신고 동물 사실상 방치 상황

#경기도 파주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포털 사이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알파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세를 탔다. 실제 업장을 방문해보니 흰색 알파카 두 마리가 있는 사육장에 손님들이 커피를 들고 알파카를 구경하고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해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야생동물 전시 유예 신고를 하지 않은 업장이었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 먹이주기를 위한 먹이 판매도 이뤄지고 있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캠핑장. 캠핑장 한 칸에 알파카 사육장이 있다. 흰색 알파카, 갈색 알파카가 한 마리씩 울타리 처진 사육장 안을 돌아다녔다. 입장료를 내고 손님으로 찾아온 아이들이 땅바닥에 있는 잔디를 뽑아 알파카에게 연신 먹였다. 이 곳도 지자체에 야생동물 전시 유예 신고를 하지 않은 업장이었다.

캠핑장, 대형카페, 동물카페 등의 영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정부가 이 같은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개정 야생동물법(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김포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질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 야생동물법



경기도 용인시의 한 캠핑장에 조성된 알파카 사육장. /독자 제공

이 시행된 2023년 12월 13일 이전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지자체에 유예 신고를 완료해 내년 12월 13일까지 유예된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종과 개체 수를 파악했고, 미신고 종들과 개체수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2023년 이후 4년의 유예 기간 중 3년이 지나고 있지만, 미신고 동물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개정된 야생동물법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는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 개정 이후 신규 야생동물을 들여와 전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사육 환경 조성

과 전문 인력 고용이 필요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신고 전시 야생동물 단속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전시유예

미신고 업체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 접수나 무허가·미신고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3년간 야생동물카페 및 동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먹이주기·만지기 등 체험행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점검횟수는 ▲2023년 7회 ▲2024년 62회 ▲2025년 69회 ▲2026년 5월까지 123회였고 체험행위 위반 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 건은 2024년 3건, 2025년 2건에 그쳤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는 ‘미신고 전시 야생동물 보호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야생동물 전시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미신고 전시시설 내 야생동물의 유기·방치 등에 대비해 보호시설 확충, 서식지 외 보전기관 및 동물원 활용 등을 통해 야생동물의 적정한 사육 환경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생동물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덜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살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야생동물법 개정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표명된 만큼 전시 야생동물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정부는 미신고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고 법령에 대한 홍보를 사업주와 이용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전력수급기본계획 공론화 대주제 확정

원전공론화 위원회 2차 회의
원전 계속운전 등 논의 제외

국가에너지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대주제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정해졌다. 부제는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원전 역할과 비중’이다. 기존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나 이미 부지를 확보한 원전 등은 논의 범위에서 빠진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 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번 공론화의 대주제와 부제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운영규정을 최종 의결하고,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속의자료집 작성과 온라인 동영상 제작 등을 맡을 전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환경, 원자력, 중립 등 각계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차기 회의까지 환경단체 및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쟁점은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의제에서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 심사 사항)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 등 4가지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전력 수급 전반의 큰 그림과 원전의 역할이라는 본질적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을 다하는 원전 10기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나,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등을 위해 계속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계속운전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